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휴대폰으로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을 꼼꼼하게 읽는다. 끊임없이 세계 경제 흐름을 챙기면서 넓혀온 식견과 대통령 수석경제비서관, 재무부 장관으로 쌓은 연륜을 바탕으로 명망가들과 교류했다.

그가 최근 한국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변수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방안을 담은 두 권의 책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의 살길을 찾자>와 <한국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을 펴냈다.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과 인터뷰를 묶어냈다. 사공 명예이사장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이번에 두 권의 책을 펴낸 계기가 궁금합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와 당국에 편지를 쓴다는 심정으로 언론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제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책자로 묶어 출판했습니다.”

###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단편적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시대적 사명인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장·단기 정책을 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교육개혁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장관에게 부처 인사권을 돌려주고 또 오랜 기간 임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 책임제의 장점은 부처 수장이 장기 재임하면서 긴 호흡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시로 장관을 교체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등 내각책임제의 단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부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과 교육개혁을 책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노조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반면 다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소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될 겁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데만 관심을 쏟으면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복지와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꿔야 합니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교육을 구분하는 과거 교육 패러다임에서도 탈피해야 합니다.”

### ▷정부가 노동계와의 관계를 의식해 노동개혁을 주저하는 게 아닐까요.

“노동개혁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유럽의 병자’라던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노